

투데이 칼럼

한미 안보 비용

한미가 관세와 안보 비용을 묶어 '패키지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안보 비용과 관련해 한쪽은 '방위비 분담금'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국방비(국방 예산)를 의제로 언급해 차이가 나는 모습이다.

한미가 아직 안보 협상의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통상·구매·안보 관련 현안을 망라한 패키지를 고려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면서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관한 것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약 13조 원)로 현재의 9~10배가량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큰 차이가 나는 모습이다.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은 성격과 목적, 확정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국방비는 국가의 자위력 확보와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총예산이다. 올해 국방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32% 수준인

61조 2469억 원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기본적으로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인건비와 군사건설, 군수지원 등 직접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한국의 자체 방위력 개선과 정비에 관계가 있지 않다.

우리 정부가 정할 수 있는 국방비와 달리 방위비 분담금은 SMA 협정에 따라 확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한미 간 협상이 필요하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규정하는 SMA 틀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선 현재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으로 제한된 한국의 부담 범위와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사실상 새로운 협정을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도 나토 회원국처럼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릴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국이 이 기준에 맞출 경우 최대 70조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받고, 이 금액을 국방비 인상분에 넣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미국산 무기의 추가 구입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방산 기업의 미국 공장 설립 등 국방비 증액을 위한

대안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련 언급의 진의는 불분명하다. 그가 국방비와 방위비의 개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압박 차원의 언급을 했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SMA 재협상이 안보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안건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주무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내각회의에서 나왔다. 한국이 국방비 인상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도 올리는 협상을 진행하라는 일종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억 달러 발언이 SMA에만 국한돼 있다고 보긴 어렵다. 국방비 인상 요구와 섞여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높은 액수를 언급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최 귀 문

부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감



기초질서 준수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이자 핵심 덕목

기초질서 준수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이자 핵심적인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초질서 위반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212만 건 중, 불법광고물 98만건(44%, 1위), 쓰레기 투기는 28.5만 건(13.5%, 3위)을 차지했다.

기타 생활불편신고가 77.5만 건(36.6%)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대표적인 질서위반 행위로 무단취식·무임승차, 음주소란이 매년 증가 중에 있으며, 일포매매는 시민들의 건

전한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어느 순간 우리 국민들에게 기초질서를 위반해도 처벌이 약하다는 이유로 기초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질서의식은 그 사회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사회 분위기 조성과 미래의 질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국민 한사람이 예이! 나 하나쯤이야 관할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개인의 무질서가 사회의 무질서로 바뀌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기초질서 위반시범단속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하여 그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기초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적

사설

지리멸렬한 야당

야당인 국민의힘이 갈수록 지리멸렬하다. 안철수는 혁신위원장을 맡았지만 인적 청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닷새 만에 물러나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 지도부를 장악한 '친윤'의 벽에 완전히 가로막혔다. 앞서 6월 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이 퇴장했다. 김문수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에서 가장 신선했던 것은 당내 최연소인 1990년생 김용태의 비대위원장 발탁이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대선 패배 뒤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시도 당무 감사, 당론 결정 시 당심·민심 모두 반영, 100% 상향식 공천 실시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변화'와 '쇄신'을 두려워한다. 야당은 김용태의 개혁안도 못 받으면서 안철수를 혁신위원장에 앉혔다. 안철수의 뒤를

이어 윤희숙 여의도연구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됐지만, 친윤의 벽은 여전하다.

국민의힘의 집선인 한나라당은 2004년에도 풍전등화의 위기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었다. 16대 대선에서 800여억 원의 대선자금을 '차떼기' 등 불법으로 모은 것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여의도 당사와 천안연수원을 매각해 불법자금을 갚겠다며 당사를 여의도 공터의 천막당사로 옮겼다.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참패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백서조차 내지 않는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인물 역시 단 한 명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출범한 문재인 정권에서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은 지리멸렬했다. 보수의 양심과 정신을 잃은 그들을 보수층이 지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

조용필 광복 80주년 콘서트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KBS가 '조용필'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레전드, 조용필이 KBS에서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에 선보이는 단독 무대다.

올해 데뷔 57년을 맞은 조용필의 대형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콘서트는 9월 6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추석 연휴 기간 KBS 2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조용필(趙容弼)은 1950년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에 태어났다. 본관은 임천(林川)이다. 1969년에 경동고등학교를 25회로 졸업하고 컨트리 웨스턴 그룹 애트킨즈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다가 1969년에 '화이트 핑거스'를 결성하여 미 8군 무대에 데뷔하였다.

1971년 3인조 음악 그룹 김트

리오로 본격적인 락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26세가 되던 1976년에 솔로로 전향하여 발표한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후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당시 재일교포 교육 방문과 맞물려 발표된 이 노래는 부산에서부터 인기가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퍼졌고, 조용필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1979년에 현재의 그룹 '위대한 탄생'을 결성하고 공식적으로 가요계에 데뷔하여 정규 1집 음반 수록곡 '창밖의 여자'를 발표했다.

이 음반은 대한민국 최초로 100만장 이상 팔린 밀리언 셀러 단일 음반이다.

가요계의 살아있는 역사, 전설, 가왕(歌王), 국민가수 등으로 불리며 한국 대중음악을 크게 발전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